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62
----------	------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김예지 · 김상욱 · 서미화
김소희 · 이종배 · 정성국
박정하 · 박덕흠 · 최수진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그 외 정치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를 “「대한민국헌법」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 ----- ----- ----- ----- ----- -----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1. ----- ----- ----- ----- ----- ----- ----- ----- ----- ----- ----- 「대한민국 헌법」 에서-----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